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

2005년 3월 23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목 차

- I. 신용불량자 대책 추진현황과 평가**
- II.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태 분석**
- III.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
- IV. 금융권 공동추심 프로그램 운영 방안**
- V. 기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1. 신용불량자 대책 추진현황과 평가

1. 대책 추진현황

2. 평 가

3. 향후 대책방향

- 지난해 3월, 관계전문가 및 금융권의 의견 수렴, 신용불량자에 대한 다각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없이 단계적으로 추진

① 신용불량자 특성별로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여 04년중 97만명 지원(이중 75만명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 추정)

		신용불량자에서 해제 지원	등록전 지원
단일기관 신용불량자	개별 금융기관에서 적극 대응	20만명 추정	22만명 추정
다중 신용불량자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LG-산은 공동추진	17만명 26만명 12만명	
		75만명	22만명

②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

- ▶ 개인회생제도 (04.9.23일부터 시행) : 9,058명 신청
- ▶ 개인파산제도 : 12,373명 신청

③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편

- ▶ 작년말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고 05.4.28일부터 시행 예정

④ 일자리와 연계하여 신용회복을 지원

- ▶ 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
- ▶ 신용회복위원회 추천 신불자에 대해 신용보증서 발급(서울보증보험)

⑤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능력 제고

- ▶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운영상황에 대한 감독 강화
- ▶ 개인신용평가회사(CB)설립지원 등 신용인프라 확충

⑥ 불법채권추심행위 방지

- ▶ 불법추심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토록 지도
- ▶ 04.3.18일부터 불법추심행위 신고센터(금감원) 운영

■ 신용불량자 감소세로 전환

- 04.3월 신용불량자 대책 수립 이전에는 월평균 7만명 증가
- 연구기관 등에서는 04년중 월평균 5~8만명 수준 증가 예상
- 대책효과가 가시화되면서 04.6월부터 감소추세로 반전

※ 신용불량자 월평균 증감(만명, 세금채납자·사망자 정비 등 특이요인 제외)
: (03) 9.0→(04.1/4) 6.6→(2/4) 0.9→(3/4) △0.9→(4/4) △1.2

< 신용불량자 월평균 증감 추이 (만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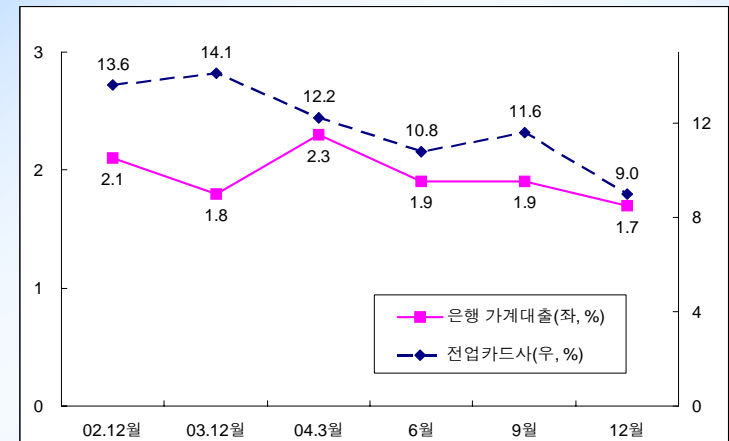


※ 세금채납자 제외(04.3월 15만명), 사망자 정비(04.5~12월중 12만명) 등 특이요인 제외

■ 도덕적 해이의 효과적인 차단

- 자기책임원칙에 기초한 신용회복지원으로
도덕적 해이 차단 → 금융권 연체율 하향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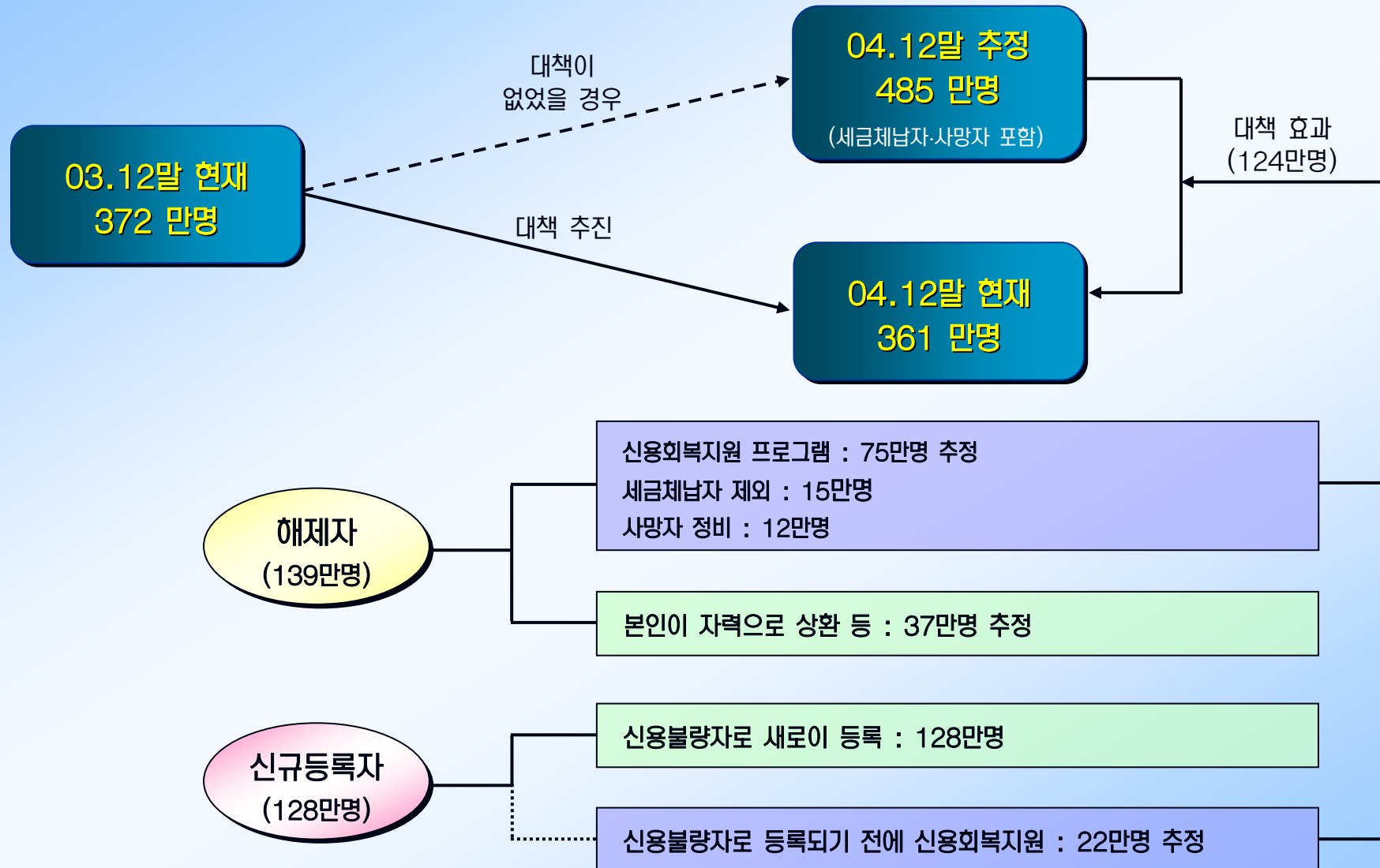
< 은행, 카드사 연체율 추이(%) >



■ 신불자문제 해결에 대한 금융권의 공감대 확산

- 620개 금융기관 참여하에 배드뱅크 설립·운영
- 신용회복위원회의 참여 금융기관 대폭 확대

※ (04.3.10일 대책이전) 185개 → (05.2.28일 현재) 3,586개



■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융권이 공동 대응하여 신용불량자 문제를 마무리할 필요

- ①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 마련·추진
- ② 다중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 대한 공동추심 프로그램 방안 강구
- ③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신용회복지원 강화



금융채무 불이행자

- 추심압박 등 채무상환 부담 경감
-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 제고

금융기관

- 과거의 부실을 털어내고 가계금융의 정상화 계기 마련
- 보다 정밀한 신용평가를 토대로 대출을 하는 선진 금융관행 정립

국민 경제

-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차단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
- 가계채무 문제가 점차 해결되면서 민간소비 회복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기대



II.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태 분석

- 1. 실태조사 개요**
- 2. 실태분석 결과**
- 3. 시 사 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신용불량자

- ① 보건복지부 및 은행연합회의 전산DB를 통해 부채규모 등 실태 파악
- ② Survey (05. 2. 5 ~ 2. 25)
 - 조사대상 : 총 1,073명 (신용불량자 573명, 비신용불량자 477명, 모름/무응답 23명)
 - 조사방법 : 시·도 복지담당 공무원이 전화·대면 등을 통해 직접 조사

청년층 신용불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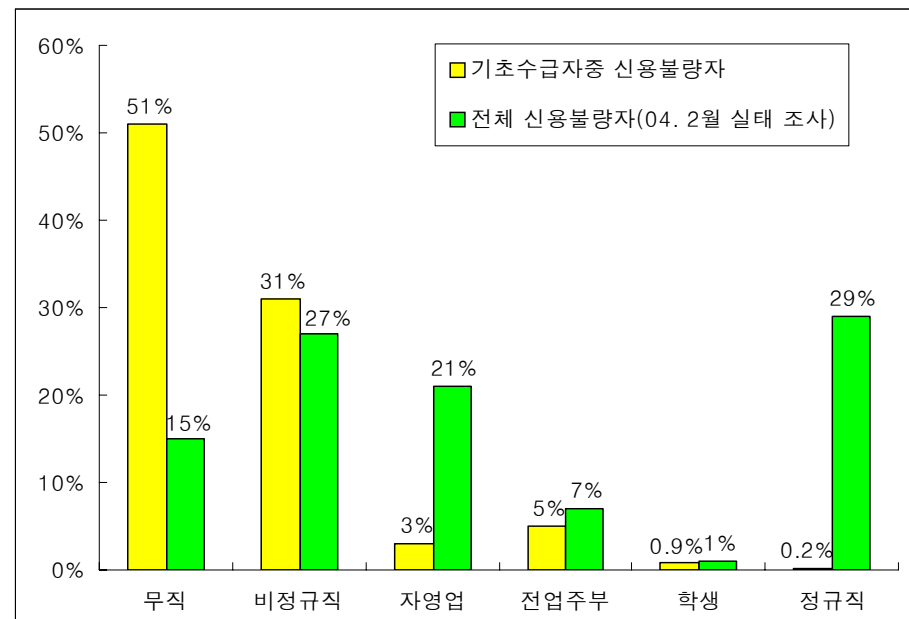
- ① 학자금 신용불량자 : 학자금 대출 취급중인 금융기관(25개사)을 통해 실태 파악
- ② 신용불량 등록당시 미성년자였던 청년층 신용불량자 : 은행연합회를 통해 실태 파악

영세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 ① 국세청,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부채규모 등 실태 파악
- ②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Survey (05. 1. 27 ~ 2. 25)
 - 조사대상 : 총 2,540명 (표본추출 : 3개 은행 연체자 1,534명, 신용회복위원회 1,006명)
- ③ 금융기관 창구 직원을 통한 영세자영업자 실태 Survey (05. 1. 25 ~ 2. 25)
 - 조사대상 : 총 1,000명 (금융기관 45개사의 일선 창구 직원)

1 대상자 규모 및 채무·직업 현황(04.12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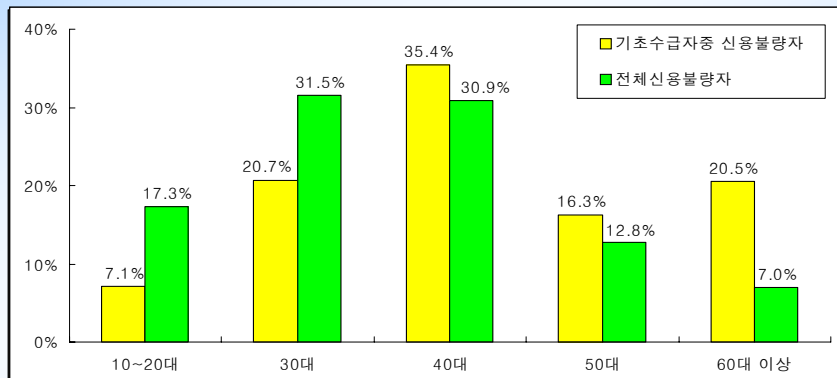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04.12말 142만명)중
신용불량자 15.5만명
- 신용불량 등록당시 원금 합계 : 1인당 약 2,332만원
- 직업별로는 무직, 비정규직, 주부, 학생 등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한 사람이 88%를 차지 (Survey)



	기초수급자중 신용불량자	전체 신용불량자 (04.2월 실태조사)
직업	<u>무 직</u> 51%	<u>무 직</u> 15%
	비정규직 31%	비정규직 27%
	<u>자영업</u> 3%	<u>자영업</u> 21%
	전업주부 5%	전업주부 7%
	학 생 0.9%	학 생 1%
	<u>정규직</u> 0.2%	<u>정규직</u> 29%
	무응답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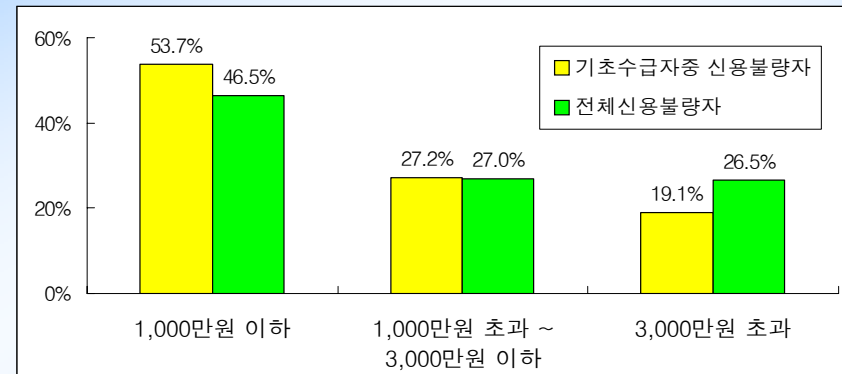
2 연령별 현황

- 10대~30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4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3 채무구간별 현황

-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가 54% (전체 신불자 47%)
- 3,000만원 초과 고액 채무자도 19% (전체 신불자 27%)



4 거래금융기관 수 현황

- 1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채무자 42%(전체 신불자 35%)
- 2개 이상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는 58%(전체 신불자 65%)

	기초수급자중 신용불량자	전체 신용불량자
1개 금융기관	41.8%	35.0%
다중 (2개 금융기관 이상)	58.2%	65.0%
평균 거래금융기관 수	2.8개	3.3개

5 금융업권별 현황 (인원 기준)

- 은행 22%, 서민금융기관 20%, 카드사 15%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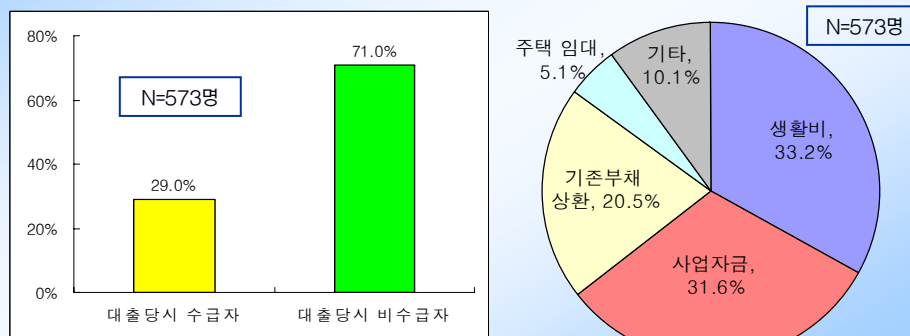
(업권별 중복 포함)

	기초수급자중 신용불량자	전체 신용불량자
은행	22.2%	24.2%
카드사	14.7%	15.9%
서민금융기관*	19.9%	19.2%
보증보험사·할부금융사	22.5%	20.7%
KAMCO 등 기타	20.7%	20.0%

* 상호저축은행,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탁

⑥ 대출당시 기초수급자 여부 및 대출금 용도 (Survey)

- 대출당시 수급자 29%, 대출금은 생활비·사업자금 등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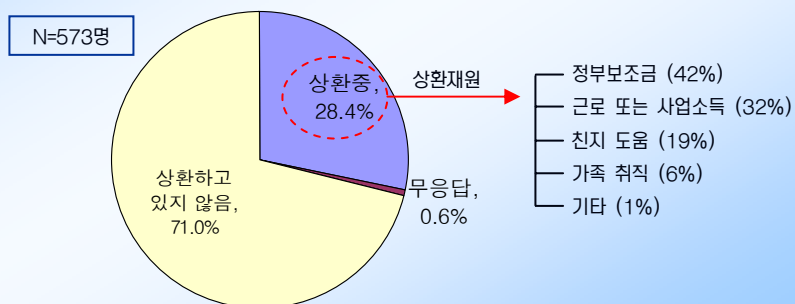


※ 00년에 기초수급자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초수급자가 급증(99년 54만명→00년 151만명)

⑦ 대출금 상환 여부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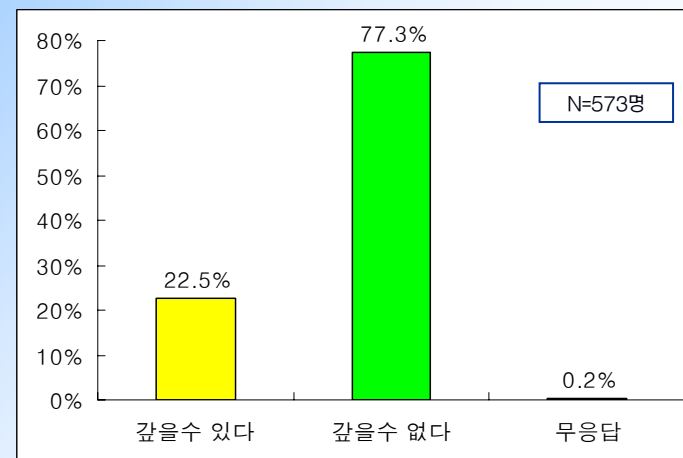
- 조사대상자중 28%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중
- 상환자금은 정부보조금(42%), 근로소득(32%) 등으로 충당

※ 조사대상자중 23%는 정부보조금으로 채무상환할 것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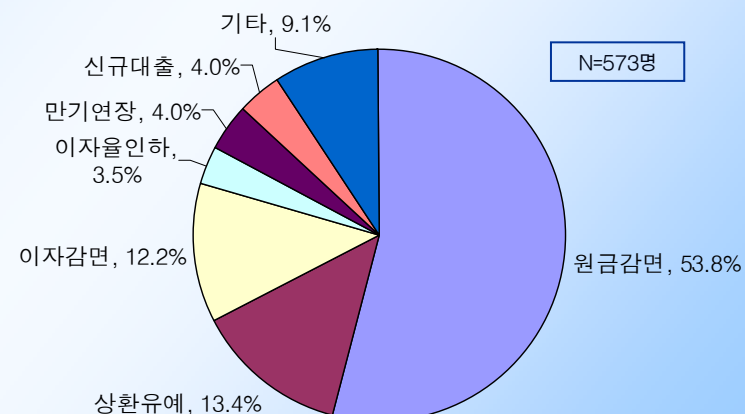


⑧ 채무상환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전망 (Survey)

- 조사대상자의 23%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



- 채무상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원금감면을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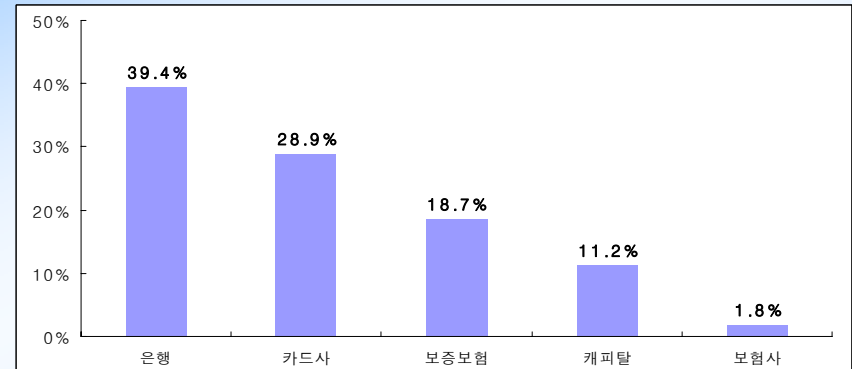
■ 학자금 연체로 인한 청년층 신용불량자

① 대상자 규모 및 채무현황(04.12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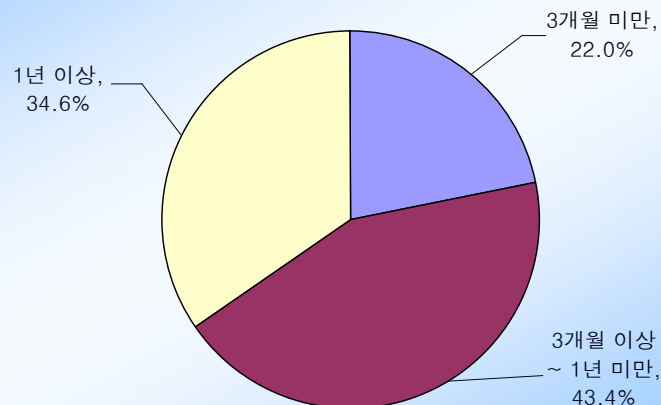
- 대상자 : 4.7만명 수준
- 신용불량 등록당시 원금 합계 : 1인당 약 228만원

② 금융업권별 현황 (인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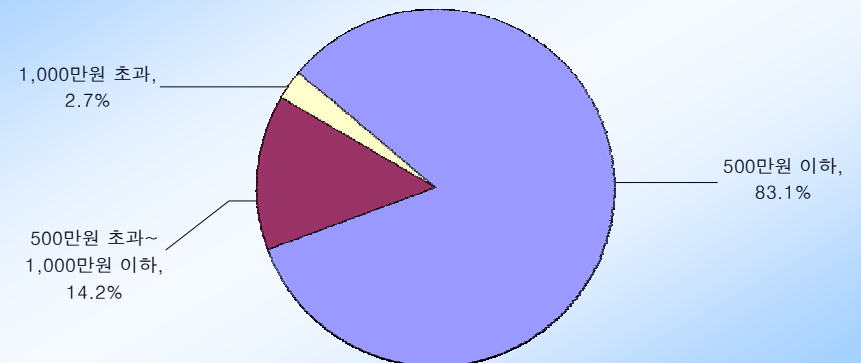
- 은행 39.4%, 신용카드사 28.9%, 보증보험 18.7% 등



③ 신용불량 등록기간 현황 : 1년 미만이 65.4%



④ 채무구간별 현황 : 500만원 이하가 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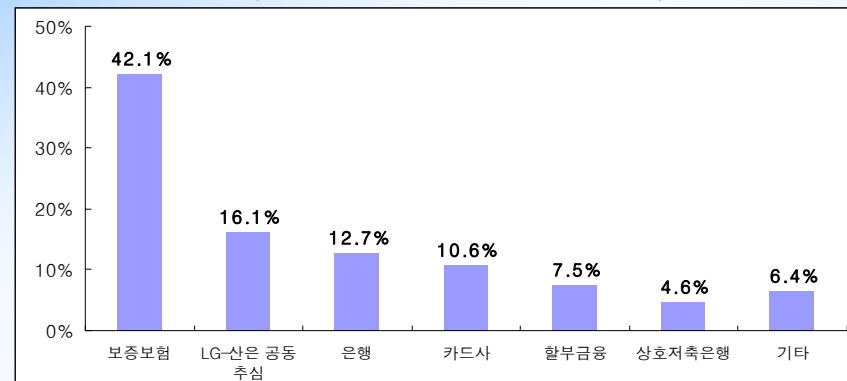
■ 신용불량 등록당시 미성년자였던 청년층 신용불량자

1 대상자 규모 및 채무현황(04.12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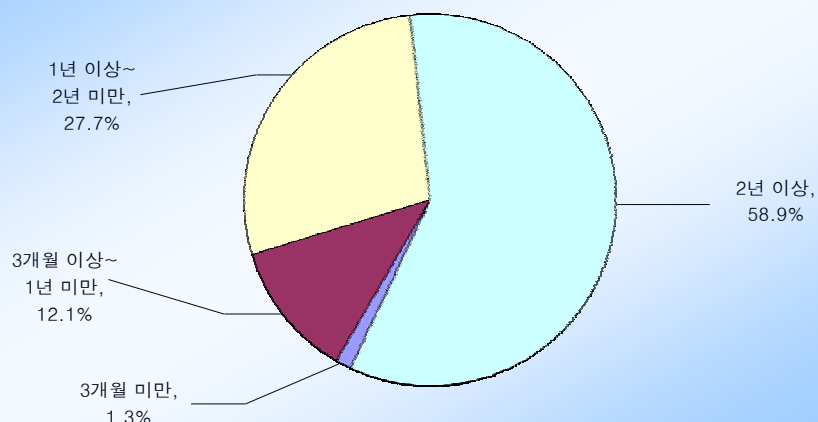
- 대상자 : 2.1만명 수준
- 신용불량 등록당시 원금합계 : 1인당 약 360만원

2 금융업권별 현황 (인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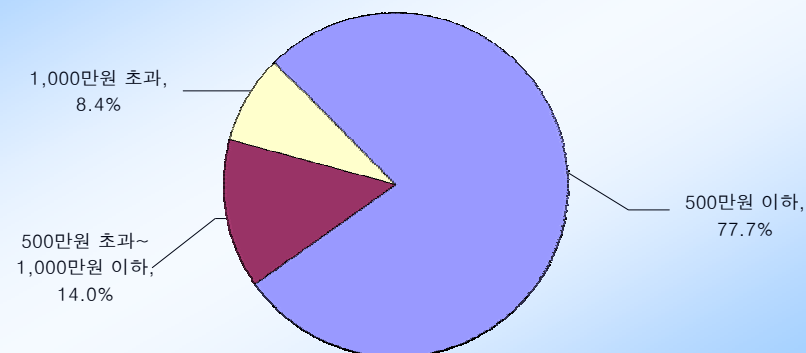
- 보증보험 42%, LG-산은 공동추심 16%, 은행 13% 등



3 신용불량 등록기간 현황 : 2년 이상이 58.9%



4 채무구간별 현황 : 500만원 이하가 77.7%



① 대상자 규모 및 채무현황(04.12말 기준)

- 영세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 15.3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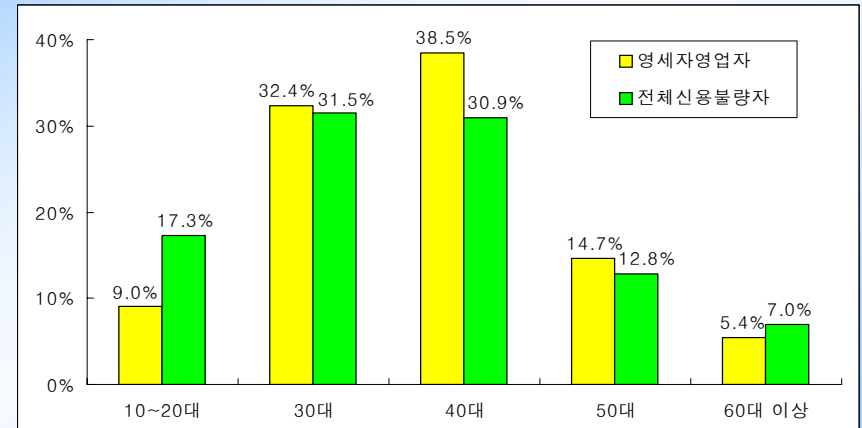
※ 영세자영업자 판단기준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 사업자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상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면세사업자 등

- 신용불량 등록당시 원금 합계 : 1인당 약 3,98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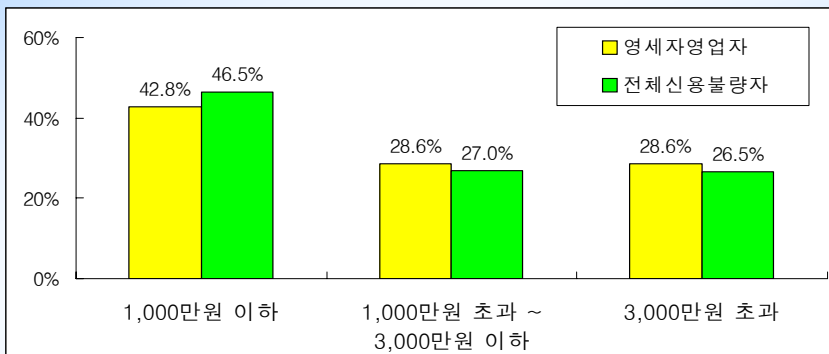
② 연령별 현황

- 경제활동의 중심인 30대~40대가 71%(전체 신불자 62%)



③ 채무구간별 현황

-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가 43% (전체 신불자 47%)
- 3,000만원 초과 고액 채무자 29% (전체 신불자 26%)



④ 거래금융기관 수 현황

- 영세자영업자중 1개 금융기관과 거래자는 32.7%
- 2개이상 다중 거래자는 67.3%

	영세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전체 신용불량자
1개 금융기관	32.7%	35.0%
다중 (2개 금융기관 이상)	67.3%	65.0%
평균 거래금융기관 수	3.6개	3.3개

5 금융업권별 현황 (인원 기준)

- 영세자영업자는 은행, 서민금융기관, 카드사 등을 많이 이용

(업권별 중복 포함)

	영세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전체 신용불량자
은행	24.4%	24.2%
카드사	18.3%	15.9%
서민금융기관*	23.0%	19.2%
보증보험사·할부금융사	18.4%	20.7%
KAMCO등 기타	15.9%	20.0%

* 상호저축은행,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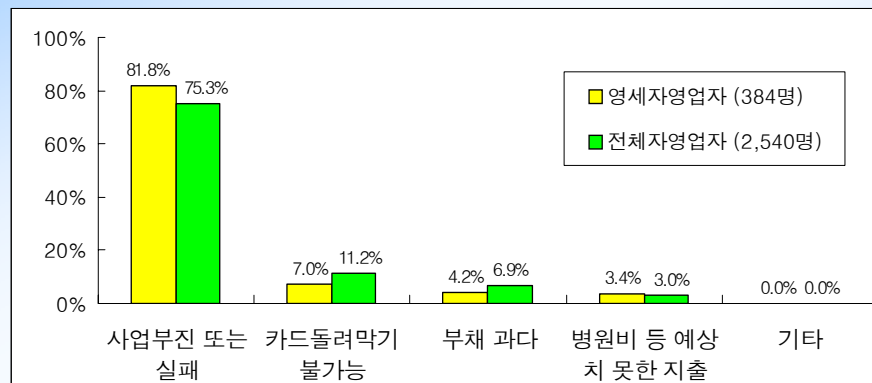
6 영세 자영업자의 특성 (Survey)

- 점포는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가 72%
- 점포직원은 2인이하가 80%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제조업, 음식·숙박업이 68%

점포 임대형태	직원 수(본인 포함)	업종별
본인소유 15.9%	1명(본인) 49.5%	제조업 23.7%
전세 8.6%	2명 30.5%	도소매업 26.6%
월세 71.6%	3명 이상 20.1%	음식·숙박업 17.2%
기타 1.8%		건설·부동산·사업서비스 11.7%
		기 타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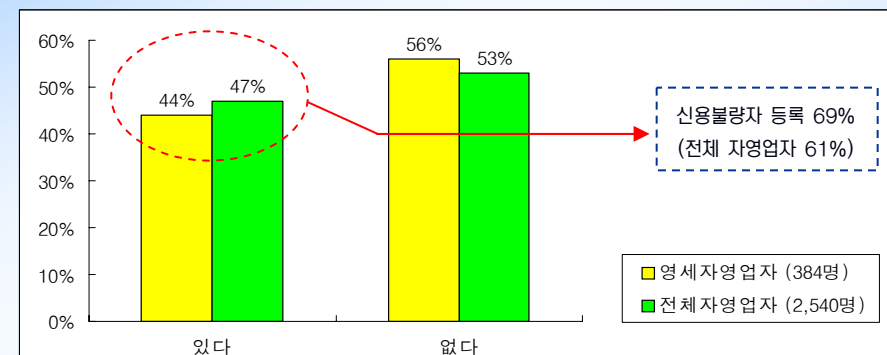
7 대출금 연체 이유 (Survey)

- 사업부진, 카드돌려막기 불가능 등이 주요한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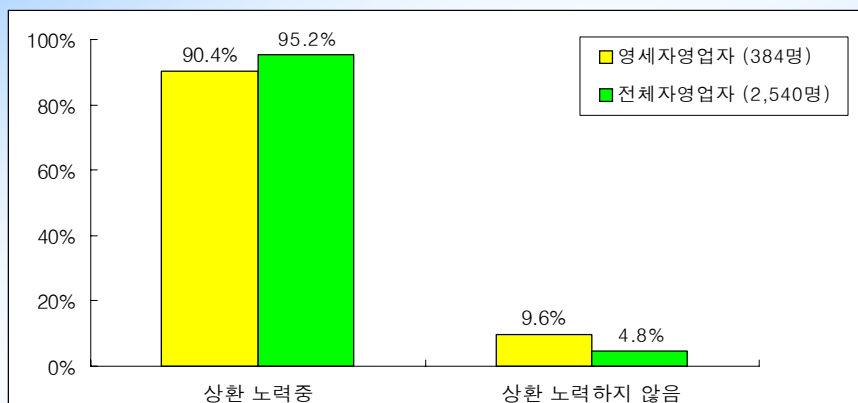
8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다른 가족의 대출 경험 (Survey)

- 경험이 있는 경우가 영세자영업자중 44% (전체 47%)
- 이로 인해 가족이 신불자가 된 경우는 69% (전체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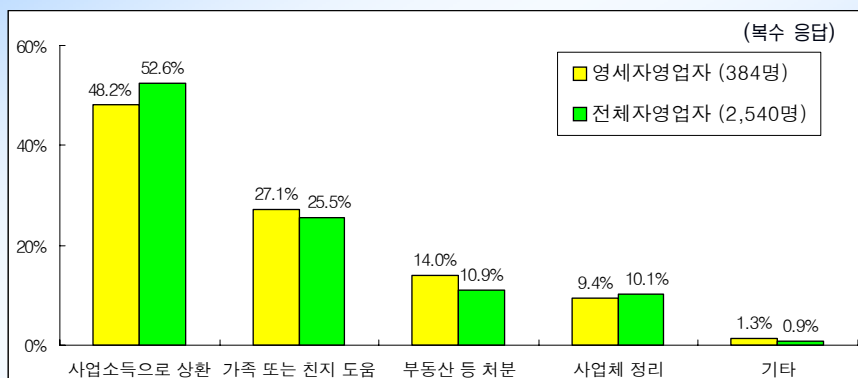
9 대출금 상환 여부 (Survey)

- 영세자영업자중 90%가 대출금 상환을 위해 노력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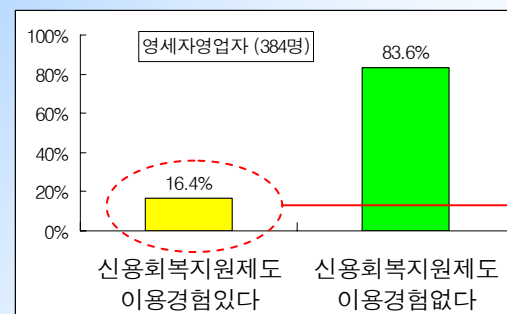
10 대출금 상환 노력 유형 (Survey)

- 상환노력을 하고 있는 자중 약 50%는 사업소득으로 상환
- 가족도움, 부동산 등 처분, 사업체 정리 등을 통해서도 상환



11 영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경험(Survey)

- 영세자영업자중 16%만 이용
- 이용자의 68%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도움이 안 된 이유로는 '혜택이 적다', '현행제도가 소득이 일정한 정기소득자 위주이기 때문' 이라고 주로 응답



<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실효성 >

도움 O	도움 X
68.3%	31.7%

<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

	영세자영업자	금융기관 직원 대상 설문결과
혜택 적어서	35.0%	11.4%
정기소득자 위주	45.0%	45.5%
자격 제한	15.0%	14.9%
절차 복잡	0%	16.3%
기타	5.0%	11.9%

조사 결과	시 사 점	대 응 방 향
① 기초수급자중 신용불량자는 무직·비정규직 등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한 사람이 대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기간 채무상환 가능성 낮음 •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유예기간 이후에는 장기 분할 상환
② 청년층 신용불량자는 소액 채무자가 대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은 소액임에도 실업·군복무 등으로 채무상환 곤란 ※ 청년층 실업률 : (05.1월)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상환을 일정기간 유예 • 일자리 알선 등의 지원노력도 병행
③ 영세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가족이 대출을 받아 가족이 신불자가 된 경우도 다수 - 상당수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노력중 - 사업부진이 대출금 연체의 주요 원인 ※ 현재의 채무부담에 변화가 없으면, 44%는 현재의 점포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지원이 없으면, 가족 전체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 • 채무상환의지가 있음 • 경기회복이 최선의 해결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생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상환부담을 완화 •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해 주면서 사업개선 등 실질적인 워크아웃 방안도 함께 마련 • 일자리 알선 등 근로소득자로의 전환도 용이하도록 지원



III.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신용불량자**
- 2. 청년층 신용불량자**
- 3.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 4.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04.12.31일 기준, 15.5만명)

■ 지원방식

① 대상자가 자산관리공사(KAMCO)에 채무재조정 신청

② 신청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KAMCO에서 매입

- 대상채권의 매입 소요 비용 : 추정 시장가격의 50%만 금융기관에 지급

※ 지급 재원은 한국은행에서 저리자금 지원 추진

③ KAMCO에서 신청자의 채무를 재조정

원 금

-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 : 상환유예
-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무이자 분할상환

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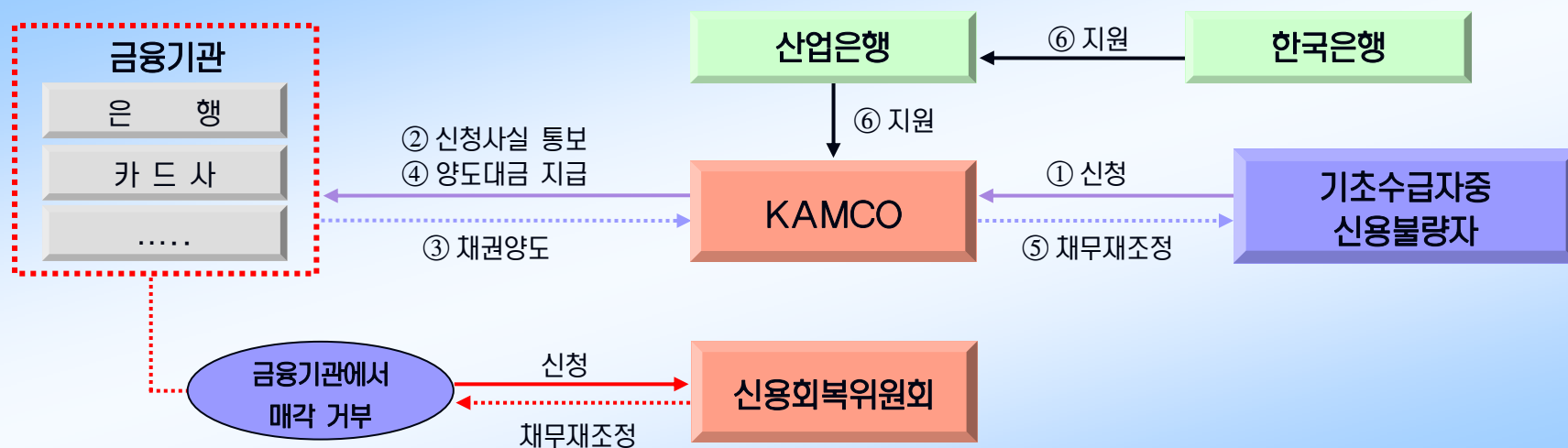
-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 면제
- 향후 발생할 이자 : 면제

■ 대상자가 신청을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대상채권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기초수급자 지원 협약」을 마련하여 지원 (1개 금융기관 단독 채무자 및 다중 채무자 모두를 대상)
- 채무재조정 내용

- 원금 : 상환유예없이 최장10년 분할상환
-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및 향후 발생이자 : 면제

※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의 채무는 조정 곤란



■ 기초수급자중 신불자는 아니지만 금융채무가 있는 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재조정 지원 방안 강구

■ 대상자(04.12.31일 기준 신용불량자)

- ① 학자금 대출 연체자, ② 군복무중인 자, ③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19세 이하),
- ④ 부모의 대출 등에 대해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예 : 부모가 신용불량자로 등록) 보증채무에 대해 이행 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층

■ 지원방식

-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층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별도로 마련 (1개 금융기관 단독 채무자 및 다중 채무자 모두를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를 창구로 대상자의 신청 접수를 받고, 서류심사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재조정 지원

원 금

- 최장 2년동안 상환유예 (실업기간중)
 - 상환유예는 최초 6개월 설정,
이후 6개월마다 본인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연장
- ※ 군복무자는 복무기간중 별도 유예
- 취업·창업 등으로 상환능력을 확보하면,
상환유예를 중단하고 최장 8년동안 분할상환

이 자

-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 원금을 약정기간내 상환시, 면제
- 향후 발생할 이자 : 원금을 약정기간내 상환시, 면제
 - 상환유예 기간중 발생이자(연 6%)
 - 분할상환 기간중 발생이자(연 6%)

■ 대상자

- 04.12.31일 현재 신용불량자인 영세 자영업자 (15.3만명 수준)

※ 영세자영업자 판단기준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 사업자(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법상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면세사업자 등

■ 지원 방식

- 신용회복위원회에 「영세 자영업자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별도로 마련 (1개 금융기관 단독 채무자 및 다중 채무자 모두를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를 창구로 대상자의 신청 접수를 받고, 서류심사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재조정 지원

원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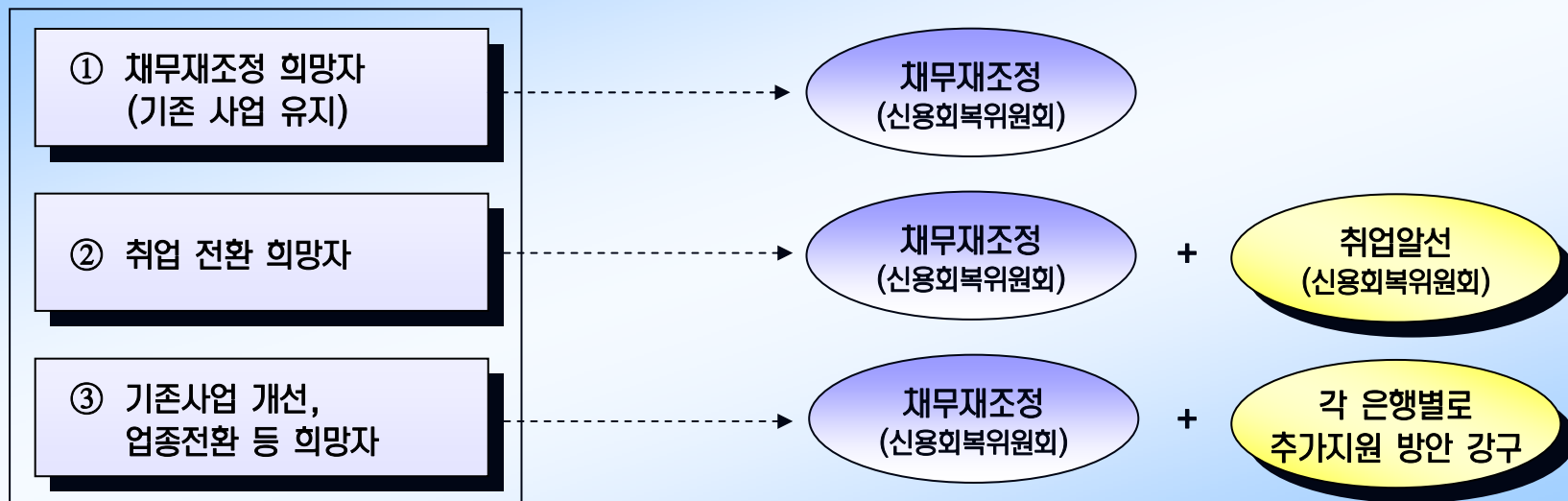
- 최장 1년동안 상환유예
 - 상환유예는 최초 6개월 설정,
6개월후 본인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추가 상환유예
- 상환유예후 최장 8년동안 분할상환
 - 채무자 상황에 따라 체증식 방식도 적극 활용

이 자

-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 : 원금을 약정기간내 상환시, 면제
- 상환유예기간중 발생 이자
 - : 연 5%로 납부
- 원금 상환기간중 발생이자(연 6%)
 - : 원금을 약정기간내 상환시, 면제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의 거래 사업자는 지원 곤란

-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안정하여 채무재조정만으로는 경제적으로 회생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형평성 문제 등으로 대폭적인 채무재조정(예 : 원금탕감)도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재조정 지원과 함께
각 은행별로 자체적인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신용회복을 지원
- ▶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 요건, 방법 등은 각 은행에서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신용불량자 대책 발표이후에 각 은행별로 자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



① 지원대상자를 엄격히 한정

-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실업·군복무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청년층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② 원금탕감 없음

- 상환능력을 확보하면 원금을 분할상환하도록 조치

③ 한시적으로 운영

- 신청기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

④ 기준 시점을 한정하여 대상자 및 대상채권 확정

- 04.12.31일 기준(예시)으로 대상자 선정
- 04.12.31일 이후 발생한 금융권 채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⑤ 신용관리교육 병행

- 지원 확정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조치

⑥ 신용정보관리

- 지원 확정자의 신용정보를 CB 등에 제공하여 개인신용정보평가자료로 활용



IV.

금융권 공동추심 프로그램

■ 대상자

- 2개이상 금융기관에 채무(5천만원이하)가 있는 신용불량자중 공동채권 추심 대상자

■ 지원 방식

① 04년 설립된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에서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

② 동 SPC에서 대상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 매입

- 금융기관에는 일정 비율 현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추가 수익을 정산
- KAMCO는 채권을 발행하여 현금 지급 소요재원을 조달 지원

※ KAMCO 자본금 확충을 위해 증자 추진(현재 자본금 1,4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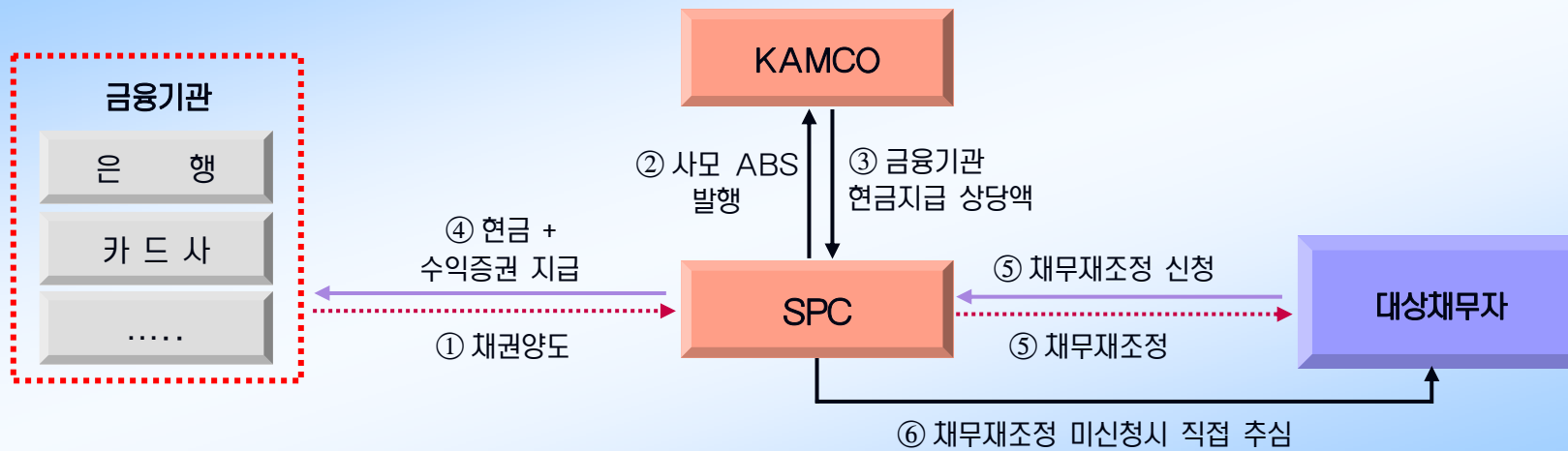
③ 매입대상자중 채무재조정을 원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방안 추진

< 예시 >

-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반지원 방식(8년까지 장기 분할상환)
- 종전 Bad Bank와 유사한 선납금 납부 방식
- 기타 채무자와 협의하는 채무조정 방식 등 활용

④ 채무재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공동추심 진행

■ 지원 체계





V.

기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①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 신용불량자 되기 이전의 한계채무자 및 자체 보유한 소액 신용불량자에 대해 각 금융기관의 실정에 맞게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 특히 채무상환의지가 있는 한계채무자에 대하여 만기연장(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상환거치 포함) 등을 적극 실시하여 신용불량자 추가 발생을 방지

※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상황을 점검하여 경영실태평가지 반영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

- 참여 금융기관 지속 확대 (05.2.28일 현재 3,586개 가입)
- 지방사무소 확충 (현재 14개 주요도시에 설치·운영중)
-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현행 총채무액 3억원 이하 → 총채무액 5억원 이하)
- 신용회복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금감원 등에서 운영 예산의 일부 지원

③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

- 금융기관 차원의 해결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홍보 등 강화